

“지역 대표축제 문제 해결 예산 집행에 그쳐선 안돼”

이명연 도의원, 행감서 축제 혁신방향 제시… “지역 문화·주민 참여 살려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은 13일 열린 제42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지역의 대표축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각 시군이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축제 운영 방식에 대해 형식화, 관광객 감소 등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축제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명연 의원은 “지역축제가 해마다 비슷한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구성되



린 ‘살아있는 축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연 의원은 “한 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축제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와 개선 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예산이 제대로 주민의 축제다운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관광객 수나 판매 실적 중심의 단기 성과보다는, 지역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지역 콘텐츠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정치검찰 집단행명 규탄”

13일 오후 1시 30분 전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정치검찰 집단행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을 징계하고 내란정당을 해산하라고 외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에 매몰된 도정, 민생은 뒷전”

최형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통합은 시·군 자율에 맡기고 도는 민생에 집중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13일 2025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전북자치도)의 행정력이 전주·완주 통합 이슈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지적하며 도정 운영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민선 8기 들어 도정의 주요 정책보다 통합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행정의 우선순위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사가 통합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가 도



“행정 전반이 통합에 동원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본질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통합 문제에 대한

민 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청 업무용 전화 걸러링까지 통합 홍보에 활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도의회 적극적 개입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당사자인 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에서 방향을 유도하거나 권고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형열 위원장은 도정의 행정력을 시·군 통합 논의보다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며, “기업유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립국악원, 다시 명성 되찾아야”

장연국 도의원, 행감서 단원 직급 고정 발생 문제점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열린 제42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국악원 단원의 직급이 고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근거로 정원의 총수 및 단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다. 단원의 직급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실제 근무평정 제도와 충돌하거나 왜곡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근평을 통해 성과가 높아도 상 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이동할 자리가 비어 있지 않으면 평가 결과와 인사에 반영되지 못한 다”며 “직급 고정인 근평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고 제기하며, “실질적 승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년 근평을 실시하면, 현실적 절차로 인식하

거나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됨으로써 단원간 불신과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아무리 단원이 우수한 근평을 받아도 승진 자리가 비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하다”며 “직급이 고정되면 아무리 긴 근속에도 직급 변동이 없는 사례가 빈번하고, 근평이 인사나 보직 변화에 반영되지 않아 동기 저하와 경력 정체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도립국악원은 대한민국의 대표문화유산인 국악의 전승과 보급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며 “정확한 조직 분석과 동시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도 절차도 없어”

김슬지 도의원, 행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파견·교류 인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파견·교류 인원은 총 86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발 절차와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파견기관의 업무 강도와 근무조건이 천차만별임에도, 현재는 인사팀 내부 판단이나 지휘부 의중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했다. 또한 파견기관 간 근무환경



차이로 인한 기관 선호도 현상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공무원의 업무량이 적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기준도 없고 절차도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한 협력방안 모색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민들의 집값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및 협력방안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댐단은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장이 뜻을 모아 성사됐다.

김 장관은 오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비사업,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 도심 내 기존에 주택공급을 계획했으나 사업 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민들의 집값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진이 지연 또는 중단된 유류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방식변경 등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주택공급 관련 협력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실무자 간 소통뿐 아니라 장관님과 지도 주주 만나자”고 화답했다.

/권희성 기자

“새만금 공항 항소심 승리 총력”

민주 도당 “지역공항의 기능·역할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향으로 정책 보완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당면 과제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승리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한 국책사업으로, 단순한 지역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며 “경제성만을 탓대로 삼으면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 설명한 데 대해 도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정책의 본래 취지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

를 표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정부는 ‘무분별한 추진 제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역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서해안권 산업벨트 완성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또 “1심 패소 이후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당 지도부에 차질 없는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을 강력히 건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항소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도당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국토부와 전북도, 정치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전북도민의 열원인 새만금국제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수사기관 출국 금지 남발 통제

민주 이성윤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사기관 중심의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같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는데도, 현 제도에서 충분한 통제장치를 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행 출국금지 대상은 ‘사범’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범죄수사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출국금지되고 있다.

또한 기간·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출국금지도 가능한 구조다.

특히 현행법상 범죄수사에 종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3 개월까지,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에 따른 검찰의 출국금지 미통지율은 작년 기준 51.2%에 달한다.

이성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출국금지제도 실효를 지적한 이래, 올해 9월 19일 입법토론회를 통해 출국금지 통제방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모색했다.

이어 지난날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로 출국금지제도를 다시금 쟁점화하고, 오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피의자·참고인별 출국금지 요건 구분 △출국금지 요청 시 수사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1년 이상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금지 심의 의무화 △수사상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미통지기간 1개월로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제도 실질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조지훈 더민주전북 상임대표

민주 원내대표 특보 임명돼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조지훈 상임대표(제11·12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특보로 임명됐다.

지난 6월 13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 5개월을 맞은 13일, 민생 회복과 개혁과제 완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특보 임명을 단행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특보로 임명된 조지훈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는 제9대 전주시의회 의장과 제11·12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을 역임하며, 전북과 전주의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 변화를 이끌어온 실물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조지훈 특보는 “전주시민과 함께 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국민과 소통하며 사회변화의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년 동안 소통과 혁신을 외쳐온 전주시민의 바램을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과 균형발전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정례회 준비 한창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 사진) 의원들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회기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 대비 연찬회를 갖고 감사 추진 방향과 주요 점검 사항을 집중 논의, 집행부의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재정운영 방향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김영태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꼼꼼한 감사와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우 기자